

# “지방소멸 위기 극복”...전남특별자치도 공론화 본격 착수

### 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150여명 참석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가 핵심...연내 특별법 제정 총력”

전남도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관심을 끌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공동 주최로,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분권 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치며 전남의 특별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세미나에서는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민기 제주대 교수),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금호초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등이 소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 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 지역으로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전남도가 마련한 특별법은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이뤄져 있으며 맞춤형 권한 특례 126건이 담겨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 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공·형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

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도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

를 내고 있다.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입주자·시공사 힘 모아 악성민원 해결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조정회의...유출지하수 배출관로 설치 등 논의

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 시공사와 힘을 모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 유출 지하수 처리 고충 문제를 해결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해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1일 1100t이 넘는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상훈 입주자대표회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CS실장,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자대표는 상호 협의 끝에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민원 해결에 합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은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깨끗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출지하수는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 행위에 의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며, 하수

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처리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민원의 근본적 해결은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유출지하수를 서방전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공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의 민원 해결 과정에서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과 신수정 의장도 입주민을 설득하는 등 힘을 보탤었다.

조정서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하수도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광주시는 시공사가 지인한 비용 등으로 유출지하수를 서방전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시공사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 때 유출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서방전 유지용수로 공급해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보다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명노 시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설계부터 잘못됐다”

### 올해 지원 17명 뿐...“저소득층 산후 조리원 이용 힘들어”

광주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인 예산 등 재정 운용으로 집행률이 낮고 사업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노(민주·서구3) 광주시의원은 20일 열린 복지건강국 2차 추경 심의에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의 기준과 사업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지역 내 7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주일 이용 기준 370만~380만원으로 전국 2위에 달한다.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올해 200명 지원을 목표로했지만, 지난 9월 기준 지원을 받은 산모는 17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원금 50만원을 받기 위해 370만원 상당의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사업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을 자치구별로 균등 분배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구수나 신청 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수요조차 반영하지 못한 ‘타상행진’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이 회수되지 않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설계 오류로 잘못 추산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자치구에 교부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이 사업 종료 후 정산돼 반납되는 지 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지원금이 배분되는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고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조정 등을 포함해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복지 우수기관 선정

광주 우치동물원이 국내 동물원 평가에서 동물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2024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치동물원이 동물복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치동물원이 협회 어워드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국내 14개 동물원·수족관으로 구성된 환경부 산하

기관이며, 야생동물과 사육동물에 대한 보전, 복지 증진,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년 국내 동물원 어워드 평가”는 전국 14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동물원 동물복지’를 평가했다.

우치동물원은 이번 평가에서 안락사가 고려됐던 기형 설기타육지거북(제리)의 인공 복갑게 수술과 세계 최초 양무새 인공부리 수술 성공, 호랑이 CT 중앙 진단, 노령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휠

체어 적용 등 멸종위기종 동물 진료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동물의 합사때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적절한 약물적용(가바펜틴 등), 건강검진을 위한 메디컬 트레이닝 등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단순한 동물 복지를 넘어 웰빙과 웰다잉을 동물에게도 적용한 것이 동물복지 우수기관 선정의 마중물이 된 듯 하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권을 존중하는 동물원이 되도록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지금 **광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광신**입니다.”

www.kwangshin.ac.kr